



한국 온열질환 양극화와 일본의 냉방복지 정책

안소영 연구원

연이은 무더위로 한국의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비에 비용부담을 느끼는 에너지 빈곤층의 상당수가 온열질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 에너지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어컨 설치비 지원 정책과 같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냉방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질병관리본부는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올해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전년 동기(5. 20~7. 21)과 비교했을 때 646명에서 1,043명으로 급증하여 약 61%(397명) 증가했다고 밝혔다¹⁾

- 발생 장소로는 야외작업과(292명) 논/밭일(162명) 중에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함(43.5%)
-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1.8%, 65세 이상이 28.4%(296명)로 장년과 고령층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같은 고열 환경에서도 에너지 빈곤 여부에 따른 온열질환 양극화가 존재함

- 에너지 소비가 높은 계층과 비교했을 때 에너지 빈곤층²⁾은 비용부담 때문에 여름철 무더위에도 냉방장치를 가동하기 힘들어 온열질환에 비교적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음

■ 실제로 한국 빈곤층의 상당수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위험에 비교적 쉽게 노출되고 있음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7)이 건강보험공단 DB를 기반으로 보험료분위별 온열질환자 발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0분위³⁾의 환자 발생 비율이 다른 분위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남(그림 1) 참조

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온열질환자 전년 대비 61% 폭증, 1주일 새 556명 발생”(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45468)

2) 영국의 ‘주택난방 및 에너지 절약법(Warm Homes and Conservation Act 2000)’에 따르면 겨울철 거실 온도 21℃, 거실 이외의 온도 18℃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에너지 구매 비용이 소득의 10%를 넘는 가구를 에너지 빈곤층으로 정의함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20분위를 5분위로 재분류한 것으로 1분위는 저소득층, 5분위는 고소득층을 의미함. 0분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이 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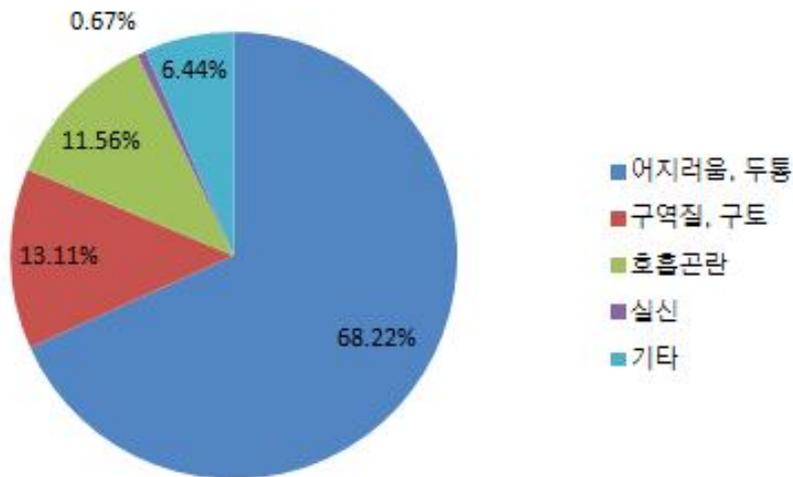
- 에너지시민연대가 올해 발표한 ‘2018년도 여름철 빈곤층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약 68%가 폭염으로 어지러움 및 두통을 경험하였으며, 폭염으로 인한 호흡 곤란 및 실신 경험을 앓는 등의 위험 수위를 경험한 경우도 약 12%에 달함(〈그림 2〉 참조)

〈그림 1〉 보험료분위별 온열질환자 발생 비율(2015년)



자료: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2017), “국가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역량 구축·평가 체감형 적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체계 구축”

〈그림 2〉 폭염으로 인한 건강이상 경험(복수응답)



자료: 에너지시민연대(2018)(http://www.enet.or.kr/index.php?document_srl=58228&mid=press_release)

■ 현재 국내에서는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효과적인 온열질환 관련 정책 수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지금까지 한국 주거복지는 난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폭염 및 온열질환 대처가 미비했음⁴⁾
- 지난 8월 6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기요금 문제를 언급하며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라고 한 바 있음⁵⁾
- 7월과 8월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한시적 누진제 완화,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을 지시함

■ 한편, 최근 일본에서는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의 중요성 인식을 바탕으로 한 냉방복지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지속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섭씨 40도를 돌파하는 더위가 지속되는 일본에서는 지난 8월 1일부터 에너지 빈곤층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한때 ‘사치품’으로 분류되던 에어컨의 구입비용을 생활필수품으로 인정하고, 생활보호 대상 세대에 최대 5만 엔(약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냉방복지’ 제도가 시행됨⁶⁾
- 한국에서도 한시적인 요금 완화 정책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일본의 냉방복지 정책 같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제도 마련이 요구됨

■ 연이은 폭염으로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된 한국인들에게 에어컨 사용은 사치재가 아니며,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에 노출된 에너지 빈곤층을 위하여 일본의 냉방 복지 정책 같은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수립해야 함 **ki ri**

4) 참여연대(2017), “에너지 빈곤의 현황과 에너지 복지를 위한 과제”(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524980)
 5) YTN(2018), “문재인 대통령 “전기요금 경감 확정 7월분 고지서 반영”(http://www.ytn.co.kr/_ln/0101_201808061637456622_001)
 6) 허핑턴포스트(2018), “일본이 에어컨을 생활필수품으로 인정했다”(https://www.huffingtonpost.kr/entry/japan_kr_5b5ee634e4b0b15aba9ad28d)